

#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위한 '더불어 성장론' 보고서

## - 저성장 시대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성장 전략

유능한 경제정당위원회

### <요약>

- 뉴노멀 시대의 유일한 성장모델로서의 '더불어 성장'
  - 더불어 성장은 '불평등해소'와 '경제성장'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성장모델이며, '경제민주화'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려는 성장전략
    - 현 정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성장전략은 불평등을 심화시킬 뿐 아니라 경제침체를 가져오는 세계적으로 낡은 전략
    - '더불어 성장'은 우리당이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경제민주화', '소득주도 성장', '분수경제'를 이어받으면서 국제적 합의인 '포용적 성장'에 기반 한 한국적 성장모델
  - 더불어 성장은 수출과 내수의 동시발전 추구
    - '더불어 성장'은 불평등해소와 계층간·지역간 상생을 통해 내수를 확대시키는 한편, 글로벌 경제라는 현실에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속적인 수출의 성장을 도모하는 양방향 발전전략
- 더불어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축으로서 공정경제, 선도경제, 네트워크경제
  - 공정경제를 통한 내수확대 성장, 선도경제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네트워크경제를 통한 상생적 발전
  - 공정경제, 선도경제, 네트워크경제는 상호전제하고 상호발전하는 유기적 관계
  - 더불어 성장의 구성과 핵심정책

더 불어 성 장	공 정 경 제	① 청년경제 활성화 - 청년일자리 70만개, 셰어하우스형 공공 임대 5만호 제공 ② 비정규직 차별 철폐 - 동일노동·동일임금, 사유제한제 도입 ③ 소득불평등 완화 - 최저임금 인상, 생활임금 확대, 적정임금제·임금분포공시제 도입 ④ 상생협력을 통한 공유가치창출 - 이익공유제 전면 확대
	선 도 경 제	① 미래산업 선점 - 핵심 신산업분야 집중 육성 ② 혁신중소기업 육성 - 과학기술부총리·중소기업 R&D특별회계 ③ 한반도 신경제지도 - 남북경협 통한 성장률제고와 일자리창출
	네 트 워 크 경 제	① 제2차 국토균형발전 - 지역특화 국가전략산업클러스터 집중지원, 국토균형발전시도지사협의회 및 국토균형발전차관 신설 ② 사회적경제 활성화 -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 ③ 도농상생 - 푸드플랜 전국 확대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위한 ‘더불어 성장론’  
- 저성장 시대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성장 전략

**<‘더불어 성장’의 의미와 구조>**

- ‘더불어 성장’은 뉴노멀 시대에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성장모델
- 더불어 성장은 ‘불평등해소’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루는 성장모델
  - ‘더불어 성장’은 현 정부에 의해 추진되는 낡은 성장전략이 불평등을 낳을 뿐 아니라 더 이상 성장을 이끌지 못한다는 국제적 합의에 입각한 새로운 성장 모델
- 더불어 성장은 우리 당이 지속적으로 추구했던 경제노선
  - ‘더불어 성장’은 재벌개혁을 중심으로 한 ‘경제민주화’의 연장선
  - ‘더불어 성장’은 분배구조개선을 통해 성장을 추구했던 ‘소득주도 성장’론의 연장선.
  - ‘더불어 성장’은 ‘낙수효과’의 비현실성을 비판하고 ‘분수효과’를 가능하게 하는 경제모델을 추구했던 ‘분수경제’의 연장선
- 더불어 성장은 다음과 같은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경제민주화를 완성
  - 기존 순환출자 단계적 해소, 집중투표제의 단계적 의무화, 주총에서 전자투표제의 도입, 집단소송제의 확대, 손해 3배배상제도 확대, 공정경쟁의 엄격한 집행, 공평과세 등 조세정의 실현
- ‘더불어 성장’은 국제적 합의인 ‘포용적 성장’에 기반 한 한국적 성장모델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는 대침체를 맞이했고, 저성장이 뉴노멀이 된 유례없는 시기를 겪고 있음.
  - 대침체 이후 세계의 석학 및 국제기구, 그리고 선진국의 싱크탱크들은 새로운 성장전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소득주도 성장’, ‘포용적 성장’ 등의 새로운 성장모델을 제시하고 있음
  - OECD 등의 국제기구들이 제시하고 있는 포용적 성장의 핵심은 ‘불평등’ 해소를 통한 성장동력의 확보, 즉 신자유주의 30년을 통해 벌어진 소득격차의 해소를 통해 내수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성장을 모색하자는 전략
- 더불어 성장은 불평등의 해소를 넘어 수출과 내수를 동시 발전시키는 모델
  - ‘더불어 성장’은 ‘분배를 통한 성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산업정책과 중소기업정책 및 지역 간, 계층 간 상생을

추구하는 정책을 포함하는 포괄적 성장모델

- 포용적 성장이 불공정 해소를 통한 내수활성화를 의미한다면, 더불어 성장은 글로벌 경제라는 현실에서 우리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속적인 수출의 성장을 도모하는 한편, 소득 불평등 해소와 지역 간, 계층 간 상생적 발전을 통해 내수확대를 추구하는 양방향 발전전략
- 우리의 경우 세계적 침체로 수출이 부진한데다 소득 불평등의 심화로 인한 내수부족으로 인해 국제수지가 '불황형 흑자'를 보이는 저성장의 덫에 빠져있음.
- '더불어 성장'을 통해 수출증대와 내수확대가 동시에 발생함으로써 갈수록 낮아지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려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할 것임

□ 더불어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축으로서 공정경제, 선도경제, 네트워크경제

○ '더불어 성장'은 공정, 선도, 네트워크경제의 세 축의 더불어 발전을 추구

- '더불어 성장'은 공정경제를 통해 '분배를 통한 성장'을 추구하고, 선도경제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기업간 협력을 모색하며, 네트워크경제를 통해 지역 간, 계층 간 상생을 추구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모델
- 세 경제 축은 상호 전제하며 상호 발전시킴. 선도경제의 핵심인 혁신중소기업의 성장은 이익공유제 등의 공정 경쟁 없이는 불가능한 한편,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여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에 기여

○ 공정경제를 통한 내수확대 성장

- 신자유주의 30년의 역사는 청년, 비정규직 등의 사회적 약자를 증가시켰고, 이는 낙수효과로 인한 성장이 아니라 내수축소를 통한 대침체라는 결과를 낳았음
- 공정경제는 '소득주도 성장', '포용적 성장', '분수경제'가 가능하기 위한 핵심 축
- 공정경제를 통한 성장전략은 사회정의를 위해서도 좋을 뿐 아니라 내수부족의 시대에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성장전략
- 공정경제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비정규직에게 부당한 차별의 개선을 약속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적절한 임금을 보장함으로써 정의롭고 풍요로운 경제를 구축하자는 전략

○ 선도경제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및 혁신중소기업 육성

- 글로벌 네트워크 경제하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국가생존

자체가 불가능

- 선도경제란 미래 신산업에 대한 적극 투자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여 한국 경제를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중소기업에 대한 R&D 지원을 통해 혁신중소기업을 육성하여 중소기업을 선도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
- 이는 일본의 엔저에 따른 가격경쟁력과 중국의 기술발전에 따른 제품경쟁력 사이에 끼인 신넛크랙커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산업혁신정책

○ 네트워크경제를 통한 상생적 발전

- 더불어 성장은 재벌중심의 배제적 경제가 아니라 다양한 계층, 지역이 이익을 공유하는 '상생형' 성장 모델
- 네트워크경제는 참여정부의 제1차 국토균형발전에 이은 제2차 국토균형발전을 통해 지역간 더불어 발전을 추구하고, 사회적 경제를 통해 사회적 가치와 경제성장의 동시발전을 이루며, 도농상생을 통해 '건강한 도시와 풍요로운 농촌'을 이룸으로써 다양한 집단, 계층 간의 상생적 성장을 가능하게 함

## <공정경제>

1

### 청년경제 활성화

#### - 청년일자리 70만개, 셰어하우스형 공공임대주택 5만 제공

□ 현황

- 박근혜정부 들어서 공식적인 청년실업률이 2013.5월 7.4%, 2014.5월 8.7%, 2015.5월 9.3%로 점점 상승하고 있으며, 청년고용률은 동 기간 40.1%에서 40.5%, 41.7%로 상승함
- 청년고용률 상승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상승하는 것은 15~29세 인구의 감소에도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임
- 즉 더 많은 청년들이 취업을 원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취업기회가 그만큼 주어지지 않기 때문임
- 청년세대의 주거문제 역시 여전히 심각함
- 통계청에 따르면 만 16세에서 34세까지 우리나라 청년 세대 가운데 주거빈곤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은 139만 명임(KBS뉴스, 2015.12.14.)

## □ 목표

- 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고용을 대폭 확대하여 청년고용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청년세대의 주거안정을 보장함

## □ 대책

- 공공부문 35만, 민간부문 37만 등 신규 청년일자리 72만개 창출
  - 공무원 17.1만, 공공기관 및 민간수탁 13.5만 신규 증원 및 신재생에너지, 농업직불금 등 지속가능관련 고용창출 4.2만 등을 통해 공공부문 35만 신규 일자리 창출
  - 청년고용할당제, 노동시간단축 등으로 민간부문 고용창출 37만
- 국민연금을 활용한 재원 10조원으로 다세대·다가구(1가구 3실 기준, 1가구 2억 원 가정)를 매입하여, 1인 기준 월세 30만원 이하 쉼어하우스형 공공 임대주택 5만을 준비하여 15만 청년층에게 제공함

##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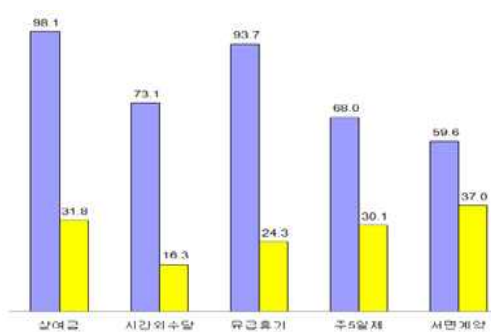
### 비정규직 차별철폐

#### - 동일노동 · 동일임금, 사유제한제 도입

## □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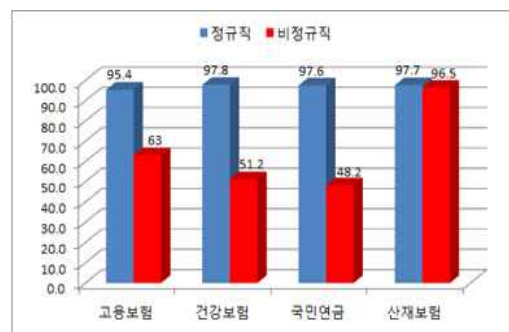
- 정규직 대비 2/3수준의 시간당 임금, 열악한 노동조건, 낮은 사회보험 가입률로 차별이 심함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조건(2010)



(자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회보험 가입률(2014)



(자료: 고용노동부)

- 2014년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은 11,463원으로 정규직 18,426원의 62.2% 수준임
- 또한 비정규직은 상여금, 시간외수당, 유급휴가 등 노동조건과 4대사회보험

가입에 있어서도 차별을 받고 있음

□ 목표

-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철폐와 동일임금 보장으로 경제정의 실현, 내수확대를 통한 안정적 성장기반을 마련함

□ 대책

- 비정규직 차별 금지와 3同 원칙(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동일처우)도입
  - ‘근로기준법’의 차별 금지 사유에 ‘고용형태’를 추가하여 비정규직을(파견 및 하도급 포함) 이유로 차별할 수 없도록 함
  - 동일한 가치를 가진 노동을 하는 노동자는 동일한 임금, 노동조건과 복지, 고용 기간 등에서 동일한 처우를 하도록 원칙을 선언
- 비정규직 사유제한제의 도입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 구성
  - 경영계는 사유제한제 도입 전제로 직무급 제도, 일반해고 제도 등을 주장하고 있으며, 노동계는 즉시 도입을 주장하고 있음
  - 비정규직 제도의 틀을 바꾸는 것으로서 사회경제적 파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사회적 타협 기구를 구성하고 사유 제한의 폭, 도입 시기 또한 직군에 대한 단계적 접근 등을 논의하도록 함

## 소득불평등 완화

### 3 - 최저임금 인상, 생활임금 확대, 적정임금제, 임금공시제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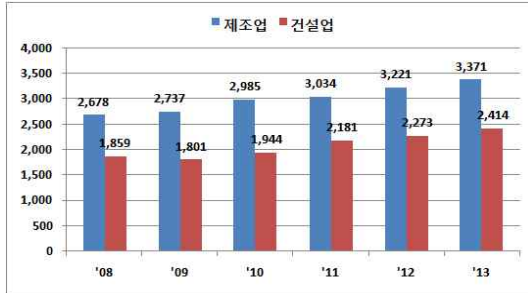
□ 현황

- 최저임금은 임금계약의 기본선이며, 저임금근로자의 최저소득보장의 주요 제도임
  - 2016년 최저임금은 6,030원이며, 월209시간 기준 월급 1,260,270원이며, 2015년 8월 기준 시간제 근로자 평균취업시간인 주 20.1시간 기준 주급 121,203원임
- 우리 경제의 직업 및 직종, 직급 등에 따른 임금격차는 작지 않은 수준이며 여전히 그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 특히 건설노동자는 제조업에 비해 임금이 낮고, 단시간 근로 비율(21.3%)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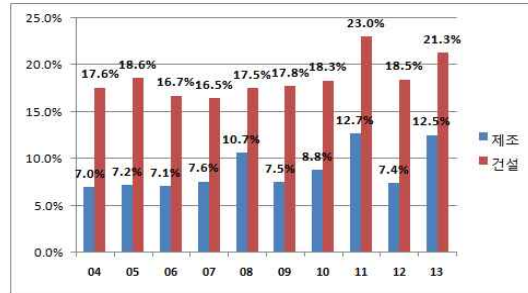
높아, 적정 수준의 임금과 일감 보장이 필요함

- 재벌닷컴에 따르면, 2014년 30대그룹 직원들의 평균연봉은 6999만 원으로 임원과 직원 사이의 평균연봉 차이는 10.8배

< 산업별 1인당 월별임금 >



< 단시간 근로 비율 >



\* 자료: 고용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자료: 고용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출처: 관계부처합동, 「제3차('15-'19)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2015.8.4.

## □ 목표

- 최저임금 인상, 생활임금 확대, 적정임금 및 임금분포공시제 도입으로 노동시장을 통한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하고 더불어 잘사는 경제 기반 구축

## □ 대책

- 임금계약 기본선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근로자의 최저소득수준 향상시키고, 생활임금을 확대시켜 상시고용근로자의 최저생활수준 보장하며, 적정임금 도입으로 일용직근로자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마련함
  - 적정임금 도입은 특히 건설노동자의 저임금 구조 개선 및 건설관련 숙련인력을 확충하고, 향후 직종 및 직급 등에 따른 과도한 임금 격차 개선할 것임
- 적정임금제는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공공사에 적용하는 원가반영 기준이자, 건설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지역별·직종별 최저임금으로 1930년대 도입되어 현재까지 이어짐
  - 우리 당은 장하나 의원이 적정임금 도입을 위해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해 놓고 있음
  - ※ 위 개정안은 적정임금을 “발주자가 공사금액의 기준으로 작성하고 사업주가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건설노동시장의 평균적인 임금을 조사하여 이를 기준으로 공표한 단가”로 규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직종별·기능별 적정임금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였으며, 적정임금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자인 공공기관의 의무, 사업주의 적정임금 지급 위반 시 벌칙을 규정함

- 임금분포공시제 도입으로 기업 내 임금분포 정보 제공 및 합리적인 소득 분배 개선방안 구축 지원
  - 각 기업마다 임금분포를 공시하여 종업원 개개인 임금 수준의 위치와 직종 및 직급 간 임금격차를 확인하여 장기적으로 기업내 합리적이고 수용가능한 성과배분체계 구축
  - 보수 및 성과배분에 대한 수용가능성 제고는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임

## 4

### 상생협력을 통한 공유가치창출

#### - 이익공유제 전면 확대, 인센티브 강화

##### □ 현황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를 통해 대·중소기업 성과공유제는 2004년부터 도입되었음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성과공유제확산추진본부에 따르면 2015년 11월 현재 213개사가 도입하였으며, 이 중 대기업은 89개사, 중견·중소기업 78개사, 공공기관 46개사임
  - 현재 ‘협력경영을 통한 공유가치창출’을 위해 원가절감형, 부품공동 개발형, 신제품 공동 개발형, 판로공동 개척형, 보유기술 이전형 등 다양한 성과공유 모형이 개발·보급되고 있으며, 실시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및 포상제도(정부조달우대, 해외동반진출지원,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정부포상, 동반지수가점, 정부 R&D우대 등)를 운영 중임

##### □ 목표

- 이익공유제 전면 확대에 따른 공정한 성과배분 체계 구축으로 대·중·소기업 상생 및 모든 경제주체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경제활동 촉진

##### □ 대책

- 이익공유제도의 전면 확대와 인센티브 강화
  - 성과공유제가 대기업과 협력사 간의 협력활동 결과로 발생한 성과를 사전에 합의한 계약에 따라 나누는데 비해 이익공유제는 기업이 이익을 협력사와 나누는 제도임
  - 이익공유방식에 따라 초과이익에 대해서만 공유하는 초과이익공유모형, 사

업자조합과 같이 공동활동에 따른 이익을 정해진 계약에 따라 공유하는 이익공유모형 등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음

- 현행 상생협력법에 따른 성과공유제와 함께 이익공유제 전면 확대를 추진하고 그 내용에 따라 성과공유제 이상의 인센티브 제공

## <선도경제>

### 1

## 미래산업의 선점

### - 핵심 신산업분야 집중 육성

#### □ 현황

- OECD의 정의에 따른 R&D 집약적 산업(하이테크산업)은 제약산업, 컴퓨터·전자·광학산업, 항공·우주산업. 현황을 보면, 한국은 컴퓨터·전자·광학산업은 주요국에 비해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나 제약산업 및 항공·우주산업에서는 절대적으로 열위에 있음
  - 연구개발비 수준 또한 2012년 한국은 컴퓨터·전자·광학산업(한국: 191억 5,300억달러, 미국: 650억 5,800만달러, 일본: 370억 9,800만달러)에 집중되어 제약산업(한국: 9억 2,700백만달러, 미국 481억 2,700억달러, 일본: 163억 7천만달러)이나 항공·우주산업(한국: 1억 4,100만달러, 미국: 248억 1,700억달러, 프랑스: 40억 8,900만달러)
  - OECD가 선정 3대 하이테크분야에 한국의 전체 연구개발비 중 차지하는 비중은 54.3%으로 이중 컴퓨터·전자·광학산업이 거의 다인 51.7%를 차지하고 제약산업은 2.3%, 항공·우주산업은 0.3%에 불과함
- OECD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한국의 에너지 효율성은 OECD 평균(0.13) 이하이고 전력 생산량 중 재생에너지 비중도 최하위
  - 에너지 소비 증가율이 연평균 6.6%('73년~'13년)로 OECD 평균 증가율(0.9%)을 크게 상회하여 OECD 국가 중 가장 높음
  - 에너지 자립도는 0.17로, 룩셈부르크(0.04), 일본(0.06)에 이어 3번째로 에너지 자립도는 최하위 수준
  - 한국의 전력 생산량 중 원자력 비중은 25.8%로 OECD 국가 중 3번째로 높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1.0%(2013년 OECD 평균은 9.0%)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 목표

- OECD가 선정한 R&D 중심 하이테크산업 분야인 항공·우주산업 및 제약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및 국제 경쟁력 강화
  - 항공·우주산업은 중국과의 기술격차도 크게 벌어져 있고, 항공·우주산업은 IT를 포함한 소재산업 전반에 걸친 파급효과가 큰 산업 분야로 발사체 개발의 한계와 국내 시장 협소의 문제로 더 이상의 개발을 미룰 수 없는 분야임
  - 제약산업은 연구개발 과정이 지난하고 장시간이 소요되는 분야로 독일을 포함한 유럽 국가들이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으나 선진경제의 고령화 추세를 볼 때 부가가치 측면에서는 포기하거나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부문임
- 신재생에너지의 획기적 확대
  - 선진경제에서 거의 최하위 수준의 에너지 자립도와 에너지 효율성을 가진 상태임. 원자력에 대한 지나친 의존에서 벗어나고, OECD 최하위 수준인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기 위해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급선무임.
  - 또한 2015년 「파리협정」으로 신기후체제가 출범한 가운데, 2011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7위 및 증가 속도 3위라는 위기적인 상황에 있어 전기차 등을 포함한 친환경·고효율의 자동차 산업의 육성이 시급한 상황임
- 친환경 자동차 외에도 최근 스마트카 등 생활전반에 걸쳐 IT산업을 접목하는 IoT 산업부문의 지원도 절실한 상황임. 이에 대해 현재 한국이 강점을 지닌 IT 하드웨어 부문을 바탕으로 선진경제와 경쟁력 측면에서 뒤진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개발 동기를 진작시키는 우수 소프트웨어 선정과 보호

## □ 대책

- 항공·우주산업, 제약·의료산업, 재생에너지산업, IoT·소프트웨어산업 등을 핵심 신산업·혁신분야로 집중 육성
  - 기존에 투입된 정부에서 배정한 연구개발 예산을 2배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연구개발 결과의 사업화 지원책을 대폭 강화

## □ 현황

- 한국의 총 수출액 중 국내 창출된 부가가치 비중은 2011년 기준 58.3%로 수출로 인한 부가가치 창출은 세계 10대 수출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
  - 수출의 국내 부가가치 창출 저하는 수출용 중간재의 해외의존 심화와 함께 국내 고용 및 소득 창출의 약화를 의미
  - 수출 국내 기업이 국내 기업을 통한 생산이 아닌 국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현지 생산이나 외국기업의 생산시설을 이용해 수출하는 가공무역 및 중계무역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
  - 국내 기업의 수출 규모는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의 제조업 생산은 감소하고 있음. 특히 수출에서의 국내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고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기 위해서는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공정 개선, 품질 개선, 신제품 개발, 신기술 확보 등이 요구됨
- 한편 기술 수준이 우리보다 앞선 일본은 최근 가격 면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중국은 우리와의 기술격차를 급격하게 좁히고 있는 실정임
  - 한국과 중국 간 기술 격차가 1.4년까지 축소되면서 중국 대비 한국의 기술우위가 빠르게 소멸되고 있음
  - 중국산 제품의 한국 수입 침투율은 고위 및 중위기술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한국산 제품의 중국 수입 침투율은 고위 및 중위 기술 품목 모두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에 있어 중국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가 소멸되고 있음
- 산업현장에서의 연구 및 기술 개발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은 현실적으로 요원한 상황임
  -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자금의 75%는 중소기업 자체의 자금을 바탕으로 하고 정부지원금은 25% 수준임
  - 중소기업 연구개발직 학력은 학사가 67.1%, 석사 17.6%, 기타 10.9% 순으로 나타났으며 박사는 4.3%에 불과함. 또한, 중기업 및 소기업 모두 회사대표(CEO)가 기술개발의 주역(소기업: 54.8%, 중기업: 41.8%)이고 기술개발 담당부서 직원의 역할은 소기업 23.2%, 중기업 25.5%에 머물러 연구개발이 개인 단 1명의 역량에 의해 주로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기술개발의 아이디어·정보의 원천이 대학 부설연구소를 통하는 것이

2.2%, 국공립연구기관을 통한 것이 1.6%에 그쳐 산·학·연을 통한 연구개발의 효과는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중소기업 보유기술은 중간기술기업이 60.1%, 범용기술기업 25.6%, 고기술기업이 1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외 경쟁력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 목표

-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집중투자를 통한 국내 제조업 활성화
  - 우리경제에서 제조업의 견실한 성장은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의 기본이 될 뿐 아니라 성장잠재력 확충, 생산성 제고 및 R&D혁신의 원천임
  - 내수비중이 높은 일본도 엔저를 통한 수출확대로 경기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금융위기 이후 미국, 영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도 제조업 부활을 적극 추진 중임
- 연구개발에서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는 대기업과 바람직한 생산 밸류 체인 확보
  - 현재와 같은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직·간접적 재정지원을 통한 연구개발 지원책 보다는 좀 더 직접적인 지원책이 필요함
  -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것임

#### □ 대책

- 각 부처 및 연구기관 별로 분산된 연구개발·재원의 통합적 관리와 공유를 위한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 현재 정부는 부처 간 및 사업 간 유사중복 방지 및 종합조정 강화를 부처 간 자율 조정을 우선하고 미흡한 경우 미래부 주도로 조정하겠다고 하나 동일한 지위의 부처 간 예산 및 업무 조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 연구개발 및 경영지원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R&D 특별회계’(신설)을 도입
  - ‘R&D 특별회계’를 통해 개별 중소기업과 대학연구소-국책연구소-‘중소기업 기술·경영연구소’(신설) 간 직접적 연결을 공동 연구 지원
  - 신설할 ‘중소기업 기술·경영연구소’는 기존의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 지원이 보조금 등을 통한 직접지원과 조세감면을 통한 간접지원 등 금전적 지원에만 치중되어 있다는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연구소 소속의 전문연구원을 중소기업에 직접 파견하여 협조하여 연구·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함
  - 정부는 중소·벤처기업 기술혁신 지원을 통해 공공연구기관의 운영을 총괄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의문시됨(기술개발의 아이디어·정보의 원천이 대학 부설연구소를 통하는 것은 2.2%, 국공립연구기관을 통한 것은 1.6%으로 공공연구기관의 연구개발 효과는 극히 미미한 상황임)

- 또한 ‘중소기업 기술·경영연구소’는 연구개발, 기술개발 이외에도 디자인, 금융 등에 대한 경영지원을 위한 개별 컨설팅 지원토록 함

### 3

## 한반도 신경제지도

### - 남북경협을 통한 성장을 제고와 일자리 창출

#### □ 현황

- 최근 우리나라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기 증가로 위기감이 고조됨
  - 최근 북핵문제 및 일본의 군사대국화 등으로 군사적 불신과 경쟁이 심화되어 위기감 고조
  - 북핵위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한국경제의 고질적인 문제 낳음
- 북한은 정치·경제적 위협요소이지만 기회요소이기도 함
  - 내부적 시장화 현상이 확대되고 사경제발전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북한은 경제적 잠재성이 높고, 노동력과 지하자원이 풍부한 강점이 있음
  - 5.24조치 이후 중국만이 북한과의 교역의존도를 높이고 경제협력과 공동개발의 성과를 내고 있어, 우리나라는 상생발전 기회를 놓치고 있음

#### □ 목표

- 평화·공영 체제 확립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
  - 경제활동 영역을 북한에서 시작하여 대륙과 태평양으로 확장하여 우리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
  - 경제 공동체 조성으로 경제 규모를 키우고 8천만 시장에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열며, 미국, 독일, 일본에 이어 세계 4번째로 ‘3080클럽’ 진입

#### □ 대책

- 경제활동영역을 북한과 대륙으로 확장하기 위해, 환황해 경제권과 환동해 경제권을 동시에 발전시킴
  - 남북 간 경제통합이 이루어지면 2050년까지 연평균 0.8% 추가성장과 매

년 5만개 일자리 신규 창출이 가능함. 한반도 단일경제권에 더해 동북아  
역내 경제권이 형성되면 잠재성장률을 5%까지 상승시킬 수 있음

- 새만금과 개성공단을 핵심산업단지로 개발하는 환황해 경제권의 활성화와  
더불어, 에너지산업과 수산업을 발전시켜 평화, 환경, 문화의 중심이 되는  
환동해 경제권을 성장을 동시에 진행함

○ 5.24조치 해제 및 남북경제협력 강화

- 남북의 경제상생발전을 가로막은 5.24조치를 해제, 경제협력을 강화함
- 금강산관광 재개와 개성공단의 당초 계획추진 등 남북경제협력을 지원함

○ 평화지역 발전법 추진

- 휴전선 10개 접경지역(경기도 파주시·김포시·연천군, 인천시 강화군·옹진  
군, 강원도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 발전법 추진

## <네트워크경제>

### 제2차 국토균형발전

#### 1

### - 지역특화 국가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집중지원, 국토균형발전 시·도지사협의회 및 국토균형발전차관 신설

#### □ 현황

- 지역 간 발전 및 고령화 격차의 심화
  - 수도권으로 인구 및 경제력이 집중되는 현상이 지속되어, 수도권과 비수  
도권 간 격차 확대
- 중앙주도의 획일적 지방정책 및 정책조정 기능 한계
  - 지역 간 격차 완화를 위한 지역 특성화 전략 부재 및 지역주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의 추진성과 부족
  - 지역정책 관계자들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충분한 협의 및 조정 미흡
  - 지역발전 사업에 대한 장기적인 안정성과 총괄 조정기능에 한계

#### □ 목표

- 지역 특성에 맞춘 미래먹거리 산업유치를 통해 제2차 국토균형발전 실현
  - 제1차 국토균형발전이 공공부문 이전을 핵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제 2차 국

토균형발전은 기업을 이전시킴으로써 안정적인 지역발전을 도모

- 국민 전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상향식 지역발전모델 구축 및 지역에 특화된 경쟁력 높은 산업을 유치함으로써 지역의 미래성장동력 구축

## □ 대책

### ○ 지역 특화 국가전략산업클러스터 지정 및 집중지원

- 현 정부는 다양한 지역발전전략을 제시했지만 뚜렷한 성과 없음
- 현재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지역특화발전특구 등의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지역발전 프로그램을 선택과 집중의 관점에서 국가전략산업클러스터로 통합할 필요성
- 각 지역 특화 산업의 선택은 국가가 지정하는 하향식이 아니라 지역의 요구와 상황에 맞게 상향식으로 결정
- 국가전략산업특구의 성패는 기업 유치에 있으므로 유치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소득세 감면 등의 파격적 혜택과 함께 공공부문 연구개발비 확대 지원

### ○ 기존 관련기구보다 위상이 강화된 ‘국토균형발전 시도지사협의회’ 설립

- 지역균형발전책을 국정에 우선적으로 배치하기 위해, 기존 지역발전위원회보다 위상이 강화된 국토균형발전 시도지사협의회를 설립
- 이를 통해, 지역정책 관계자들의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충분한 협의·조정·의견 수렴의 제도적 절차를 운용하여 상향식 지역정책을 추진

### ○ 국무조정실에 국토균형발전정책을 전담하는 ‘국토균형차관’ 신설

- 국토균형발전정책을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을 맡아, 국토균형발전에 관한 정책사업에 추진력과 안정성을 제고
- 지역사업들에 대해 장기적으로 계획과 실행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강화함

## 2

## 사회적 경제 활성화

### -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

## □ 현황

### ○ 공동체 사회의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진 ‘헬조선’으로 대변되는 우리나라

- 민주적 관용 및 약자 배려 등 사회적 자본이 많이 약해져, 국가권력 및

- 타인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고 사회적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음
- OECD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 국민은 자살률 1위, 노인빈곤율 1위, 노동시간 2위, 빈곤갭 3위 등 행복사회와 괴리된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음
- 현 추세가 이어진다면, 시장은 갈수록 많은 낙오자를 생산할 것이며, 정부도 국민 모두를 돌볼 수 없는 사각지대를 넓혀갈 것임
- 통합과 조율이 미흡한 사회적 경제의 주체와 정책
  - 건강한 공동체 조성 및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동의 사업목적이 있음에도 사회적 경제 주체들과 정부 조직은 각각 다른 형태로 나뉘어 있음
  - 정부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현 상황에서 정부의 칸막이는 다양한 사회적 경제 주체들의 분열을 더욱 조장하고 있음

#### □ 목표

- 국민 전체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 경제 안정망과 사회적 신뢰를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는 사회적 경제의 기반을 구축함
- 양극화 해소, 건강한 공동체 조성,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추구함

#### □ 대책

- 여야가 합의했던,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
  -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경제 조직을 포괄하는 공통의 법적토대와 정책추진 체계를 만들고, 사회적 경제에 관한 자율적인 통합생태계를 조성함
  - 국가차원에서 매 5년마다 사회적 경제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세우고, 지자체에서는 국가 계획과 조율되는 지역계획을 만들

### 3

## 도농상생

### - 건강한 도시와 풍요로운 농촌을 위한 푸드플랜 전국 확대

#### □ 현황

- 우리 국민은 안전하지 않은 먹거리 환경에 놓여있음
  - 학교급식조차 수입농산물, 가공식품이 제공되는 열악한 먹거리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며, 당뇨와 비만 등 생활습관병에 시달리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가구 당 전체 소비지출은 감소했지만 식료품부문 지출은 반대로 증가하였고, 이에 영양공급 측면에서 도시 저소득층과 같은 사각지대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 도시가계 식료품지출 부담은 늘어났으나, 오히려 농가소득은 더욱 팍팍해짐
  - 농가소득은 도시근로가구와 격차가 계속 벌어져 2014년 기준 62% 수준으로 열악해졌으며, 소득 불안정성이 높아 농민생활이 더욱 힘든 상황임

#### □ 목표

- 도시를 건강하게 농촌을 풍요롭게 하는, 도농상생의 체계를 구축
  - 지역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소비의 체계를 정비하고 신선한 농산물에 대한 도시민의 접근성을 높여, 국민의 건강을 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함
  - 농촌 중소농가의 소득 불안정성을 낮추고 농촌 번영을 촉진하기 위해, 농산물 공급에 대한 안정적 수요층을 도시에서 확보함

#### □ 대책

- 국가 먹거리 총괄계획으로 푸드플랜을 수립함
  - 먹거리 정책을 기존 개별적 관리에서 로컬푸드 생산, 유통, 식품업소 점검 등 통합적 관리로 변환하고, 먹거리 영역을 식품공급에서 건강, 환경, 경제, 공동체, 문화 등까지 확장시켜 국가 총괄계획으로서 푸드플랜을 수립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로컬푸드 수급상황 및 식품안전 등을 총괄한 푸드플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에서는 이에 맞춰 지역 농업상황에 맞는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함
- 공공기관 전체로 급식을 확대하고, 학교급식도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확대
  - 복지시설, 학교, 병원, 군대 등 정부와 지자체에 관련한 모든 공공기관에 급식을 제공하고 지원함
  - 현재 중학교까지 제공하는 학교급식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고, 친환경 급식으로 확대 지원하여 보편적 교육복지를 구현함